

## [ 종합·해설 ]

# 盧대통령 “연금·로스쿨법 볼모 잡혀”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6월 임시국회 시일이 촉박할 경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거론한 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입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과제들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연설을 추진했으나, 이 요청이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대국민 담화로 선회했다.

이날 담화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함으로써,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대국회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우선 국회 연설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당연히 국회가 일정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처사를 강도

## 민생·개혁법안 처리 요청 대국민 담화

### “한나라, 민생 하더니…” 강력 비난

높게 비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을 사학법 처리와 연계시키는 한나라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232건의 정부제출법안이 계류돼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책임 있는 법안을 갖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국회 안에서 나눠서나 거의 매일 민생을 얘기했다. 그래놓고 이처럼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라며 한나라당

을 정면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야당 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정략에 의해 민생법안 처리를 시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한참 잘못 찾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 등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탈당에 정신이 없는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盧대통령 우선 처리 촉구 중요 법안

▲국민연금법=국민연금을 적정부당·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고령층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잔재 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쌓여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업무를 통합하면 인력 절감은 불

로, 매년 징수비용만 100~2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입법이 지체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총원해야 한다.

▲임대주택법=1·31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입법이 지연되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 원의 추가적인 금리부담이 발생하고, 이것은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로스쿨법=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법조인

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문민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스스로 추진하던 법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대법원과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3년 이상 노력한 끝에 간신히 합의에 도달한 법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현행법

상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

들은 당내 경선시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

가 허용돼야 한다.



17대 대선 개표 시연회

광주시 선관위 직원들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7일 오후 광주시 대인동 동구관위에서 투표지 자동분류기의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원내감염예방 선두기업—다룰바이오텍

# 감염예방기기 렌탈사업 개시!

1년에 한번쯤 귀중한 내집의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 기회가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병원에서 병이 감염되어 연 15,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07년 2월 3일 1면 보도)

그 만큼 감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4월 이면 귀하의 사업장이 무균, 무취의 크린환경이 됩니다. 이번 렌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설치 장소** 세균이 노출되어 있는 소아과, 산생아실, 산후조리원, 수술실, 중환자실, 식품공장, 식당, 시무실, 구급차의 제균으로 하는 사업장

### ●이산화염소의 안전성에 대한 궁적인증

기 관	인 정 내 용
JFCA (유엔식품기구) 전문위원회	AD(인체선택적용기준) A 클래스 인증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의료용스토, 의료기기소독 사용허가
EPA (미국 환경보호청)	음료수, 환경정화, 공장폐기물처리 사용허가
USDA (미국 농무성)	식품, 식육소독 사용허가
FSIS (미국 식품안전감시국)	우주왕복선내부 및 우주식의 완전멸균에 채용
NASA (미국 항공우주국)	식중독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육소독에 공식 채용
HACCP (식품안전요소 품질관리제도)	식중독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육소독에 공식 채용
EFSA (유럽식품안전국)	음용수의 소독, 식품첨가물
MOHLW (일본후생노동성)	음용수의 소독, 소재분의 표백, 수영장, 목욕탕 수처리소독 일반방관, 소독에 사용허가
KFD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에 대한 살균소독, 식품첨가물

세계 WTO, FDA, EPA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증된 제품으로 구석구석 세균을 확실하게 살균·소취합니다.

4월이면 귀하의 사업장이 깨끗해 집니다.

1일(24시간) 사용시  
20~30평(실평수)-**25,000원**  
30~40평(실평수)-**35,000원**

★ 병원, 산후조리원 무료로 렌탈 해드립니다.(4일간)

(주)다룰바이오텍 전남·북총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51-17

| [062] 531-2811  
011-9616-5258

※ 안정화 이산화염소의 성능은 세균과 냄새를 동시에 제거합니다.

### ■ 인구·보건 지표로 본 남북한 10년간의 변화

# 南 선진국 수준…北은 갈수록 퇴보

영아사망률 3명 대 42명…1인당 에너지소비 원유 4,291g 대 896g

영아사망률 3명 대 42명, 모성사망률 20명 대 67명, 1인당 에너지소비(원유 기준) 4천291kg 대 896kg.

27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개한 ‘2007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인구·보건 지표들은 지난 10년간 남북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각종 지표들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극복했으나 북한의 지표들은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10년간 붕괴하거나 크게 퇴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후 1년 미만 유아 1천명 중 사망자 수인 영아사망률에

서 잘 드러난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1996년 9명에서 올해 3명으로 줄었으나 북한은 같은 기간 22명에서 42명으로 늘었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북한은 92위다.

출생아 10만명당 임신과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숨진 여성 수를 의미하는 모성 사망률도 한국은 1996년 130명에서 20명으로 크게 개선됐으나 북한은 70명에서 67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의 전반적인 보건지표 악화는 남북한 간 평균수명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0년간 남자는 68.4세에서 74.1세로, 여자는 74.4세에서 81.8세로 높아졌으나 북한은 남자는 원뉴스

원됐다.

안 의원은 “지원효과에 의문점이 많은 교류협력 기반조성자금보다는 이산가족 교류 확대나 농작물 씨앗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 기금 운용을 수탁받아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관련한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참여정부 대북지원 국민의 정부 2.27배

참여정부의 대북지원자금 규모가 국민의 정부 때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태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협력기금운용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기금을 통한 무상 대북지원 규모는 1조2천400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5천459억원에 비해 2.27배로 증가했다.

연 1%의 금리,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민족공동체회복식량 및 자재장비자관’은 그동안 총 8천4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공식 종료가 선언된 북한 경수로사업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조3천743억원이 지

원됐다.

이 의원은 “지원효과에 의문점이 많은 교류협력 기반조성자금보다는 이산가족 교류 확대나 농작물 씨앗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 기금 운용을 수탁받아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관련한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춘진 의원·이재용씨 기소…정형근의원 무혐의

#### 검찰 ‘의료비리’ 국회의원 3명 등 8명 불구속

의료계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조사부장)는 27일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의료단체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전 장관 등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은 열린우

리당 김 의원과 김병호·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등 3명이다.

후원회 계좌로 800만원을 100만씩 쪼개 후원금을 받은 뒤 돌려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장동의 전 의사협회장 녹취록에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명숙 한나라당 의원 등을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부하거나 뛰어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을 그만둔 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점에 한국 치정회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

# 모디쉬갤러리 Sale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피라 침실세트  
동글랑 2+2 가죽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죽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왕복 4人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화기 (신작수 20정)  
→ 39,000원

장롱, 회장대, 침대(에트리스별도), 탁탁  
동글랑 2+2 가죽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죽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왕복 4人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화기 (신작수 20정)  
→ 39,000원

HS-6720 비트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트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침실세트(연결장롱12자+화장